



보도

2025.3.25.(화) 10:00

배포

2025.3.24.(월)

담당 부서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김은성	(02-3145-8050)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검사팀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8160)
		담당자	팀 장	김태석	(02-3145-8323)
	은행검사2국 검사3팀	책임자	국 장	박진호	(02-3145-7200)
		담당자	팀 장	손성기	(02-3145-7222)
	중소금융검사1국 검사기획팀	책임자	국 장	이건필	(02-3145-7410)
		담당자	팀 장	이정만	(02-3145-7370)
	중소금융검사2국 검사1팀	책임자	국 장	문선기	(02-3145-8070)
		담당자	팀 장	이진우	(02-3145-8080)
	중소금융검사3국 검사2팀	책임자	국 장	이재석	(02-3145-8810)
		담당자	팀 장	이희중	(02-3145-8830)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주요내용

1 현황 및 배경

- **(국제규범)** BIS은행감독준칙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강조

* [이해관계자] 대주주, 임원 외에도 주요 직원,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족 및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포함

** [이해관계자 거래] 신용공여 외에도 용역거래, 자산 구매·판매, 공사·임대계약 등 포괄적으로 정의

- **(국내현황)** 은행법 등 국내 금융관련 법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대주주**(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중심으로 **규율**

- 주요 임직원, 그 가족 및 사적 이해관계자, 금융회사의 거래처·업무보조자 등과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방지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주로 의존하나
- 금융회사는 내규 '임직원 윤리·복무규정' 등을 통해 **이해상충, 내부 부당거래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는데 그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부족***

* 대체로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준법점검 및 사후조치가 미흡한 실정

→ **(최근 검사결과)** 최근 금감원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및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동기 및 사모임, 법무사 사무소 등 업무상 거래처와 연계된 다수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사례 적발

2 이해관계자 이해상충 등 부당거래 관련 최근 검사사례

■ **☐은행 사례** ※ 부당대출 882억원(58건), 부당 점포개설 등 확인

- ① **(영업조직 - 심사조직, 직원 - 배우자 등) 퇴직직원 G**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및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51건, 785억원)

☞ 부당대출에 참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 및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

- ② **(영업조직 - 심사조직, 직원 - 친인척)** 영업점의 대출을 점검·심사해야 할 **심사센터장 H**는 실차주와 공모하여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영업점의 지점장)를 **활용**하여 **부당대출**(5건, 27억원)을 신청하도록 한 후 **본인이 승인**

☞ H는 부당대출 대가로 차주사로부터 처형 명의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

- ③ **(현직직원 - 퇴직직원, 사적 투자관계)** 직원 I는 퇴직직원 J에게 **2억원을 투자**한 후 J 요청으로 **부당대출**(2건, 70억원)을 취급하고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J로부터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지식산업센터) **수수**

- ④ **(현직임원 - 퇴직직원·거래처)** 퇴직직원 G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은행 여신거래처)에 **은행 점포**를 **입점**(임대차)시키기 위해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고, **실무직원 반대**에도 **해당 임원의 4차례 재검토 지시** 등을 거쳐 **점포 입점**

☞ G는 골프접대 등을 통해 고위 임원과 친분을 형성하였으며, 점포개설 직후 고위 임원 자녀가 G 소유의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하여 약 2년간 급여 명목의 금전을 동 자녀 계좌로 지급

- ⑤ **(이해상충 조사 등 관련 내부통제 미작동)** 이해상충 등 관련 부당거래를 **적발, 조치**할 책임이 있는 ☐은행 ◆◆부서 등은 **제보**에 따른 **자체조사**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 등이 관여된 **조직적 부당거래**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하고, 금감원 검사기간 중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

■ **☐가상자산사업자 사례** ※ 전·현직 임원 관련 부적정한 사택 임차계약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인**에게 **고가의 사택**(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 ⑥ **(회사 - 현직임원)** 현직임원 K는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본인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

- ⑦ **(회사 - 전직임원)** 전직임원 L(현재 ☐사 고문)이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사가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는 L에게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하고, L은 이를 **분양 잔금 납부**에 사용

☞ 이후 L은 동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28억원을 수취

■ **☐농협조합 및 ☐저축은행 사례** ※ 각각 부당대출 1,083억원 및 26.5억원

- ⑧ **(금융회사 - 거래처)** ☐농협조합의 등기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던 **법무사 사무장 M**은 조합 임직원들과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변조** 등 수법을 동원하여 **부당대출**을 중개(392건, 1,083억원)하였고,

☞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진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대출을 취급

- ☐저축은행 **부장 N**은 차주사(시행사)가 **PF대출 조건**(자기자본 20%)을 충족하지 못하자 PF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사무장**에게 차주사를 위한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하였고

타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자기자본이 아님에도 **외형적으로 대출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동 조달금액을 차주사의 **자기자본에 포함**하여 심사함으로써 **PF대출**을 **부당 취급**(26.5억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21.4백만원)을 수수

■ **☐여전사 사례** ※ 부당대출 121억원(25건)

- ⑨ **(회사 - 직원, 직원 - 친인척)** ☐여전사 투자부서 실장 **P**는 **법규상 규제**(법인의 연계투자 40%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P)을 동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부당대출**을 **실행**(25건, 121억원)하여 동 대출금으로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 **100% 투자**

- **[기타 참고사례]** ☐은행의 다수 임직원은 전임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 730억원을 취급하고 일부 직원은 전임회장 친인척 관련 업체에 재취업

[→ 상세내용은 '25.2.4. 보도자료('24년 제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 개최) 참조]

3 향후 계획

-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및 범죄혐의 수사기관 **통보** 및 **협조**
-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및 **책무구조도, 준법제보 활성화**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 유도

I. 현황 및 배경

- **(국제규범)** BIS*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내부거래로 발생가능한 이해상충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BIS는 '24.4월 발표한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을 통해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원칙을 제시

- **(이해관계자 범위)** 대주주 및 그 친인척 등 외에도 주요 직원, 주요 직원 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및 가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Related Parties")

1. 은행의 자회사, 계열사(자회사 및 계열사의 자회사, 계열사, 특수목적법인 포함) 및 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2. 은행의 대주주 또는 실질 영향력 소유자(beneficial owner)
3. 이사, 고위 경영진 및 주요 직원, 고위 경영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4. 1~3에 명시된 자연인과 그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및 가까운 가족

- **(이해관계자 거래)** 신용공여 외에도 용역거래, 자산 구매 및 판매, 공사 및 임대 계약, 파생 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거래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거래 ("Related Party Transactions") : 신용공여, 용역거래, 자산 구매 및 판매, 공사 및 임대 계약, 파생 거래 등 모두 포함

- **(내부통제절차)** 이해관계자 익스포저에 대한 정기적 식별·점검, 이사회 사전 승인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필수 기준("Essential criteria")

1. 법, 규정 등에서 이해관계자의 범위 포괄적 규정
2. 이해관계자 거래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 제공 금지
3. 일정 금액 초과, 특별한 위험 초래 가능한 이해관계자 거래 이사회 사전 승인
4. 이해상충이 있는 이사회 구성원 관련 거래 승인 절차에서 배제
5. 이해관계자 익스포저 한도 설정, 담보요구 및 자본공제 등 의무 규정
6. 이해관계자 익스포저 식별(개별 및 전체), 모니터링 및 경영진 등에게 보고
7. 이해관계자 익스포저 합계 정기적 점검, 특정금액 초과 거래 감독당국에 보고

□ **(국내현황)** 은행법 등 국내법규*에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를 중심으로 여신(신용공여) 등 일부 유형에 한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 대주주·자회사 신용공여 한도 제한,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한도 제한, 모은행-자은행간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 및 불량자산 거래 금지, 임직원 대출 제한 등

- 주요 임직원 및 동 임직원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 금융회사의 거래처 관련자 등과의 부당거래 방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통해 규율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금융회사는 대체로 내규 '윤리규정', '복무규정' 등을 통해 이해상충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 정기적인 자체 준법점검 및 사후조치 등 미흡

◆ (예 : △△은행 내규 “임직원 행동강령” 발췌)

- 임직원은 고객 또는 은행과 이해충돌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 지침」에서 정하는 ▽▽▽와 상담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 운영지침」에서 정의하는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심지어 이해관계자 등 관련 부당행위 발생시 대외 비난 등 평판 저하 등을 우려하여 사고를 축소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검사결과)**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현직 임직원 외에도 퇴직 임직원 및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 동기,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다수의 부당거래 등 이해상충 방지 실패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II. 이해관계자 이해상충 등 관련 최근 검사사례

※ 법규 위반 여부 및 관련 상세 내용은 향후 검사처리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금감원 현장검사 과정에서 퇴직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친인척, 입행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부당한 거래(대출, 임대차 계약 등)가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이루어진 사례 다수 발견

-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부당한 거래(금융사고)를 인지하고도 평판 저하 등을 우려하여 사고 축소·은폐를 시도하고, 금감원에 허위·축소 보고

☐은행

①,②,③부당대출 882억원(58건), ④부당 점포개설 및 관련
금품수수, ⑤금융사고 허위·축소 보고 및 검사방해

- ☐ (영업조직 - 심사조직, 직원 - 배우자 등^①) ☐은행 퇴직직원 G*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팀장·심사역), 입행 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등 총 28명과 공모하거나 이들의 조력을 받아

* ☐은행에 약 14년 근무 후 퇴직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부동산업 관련 법인을 본인, 가족, 직원 등 명의로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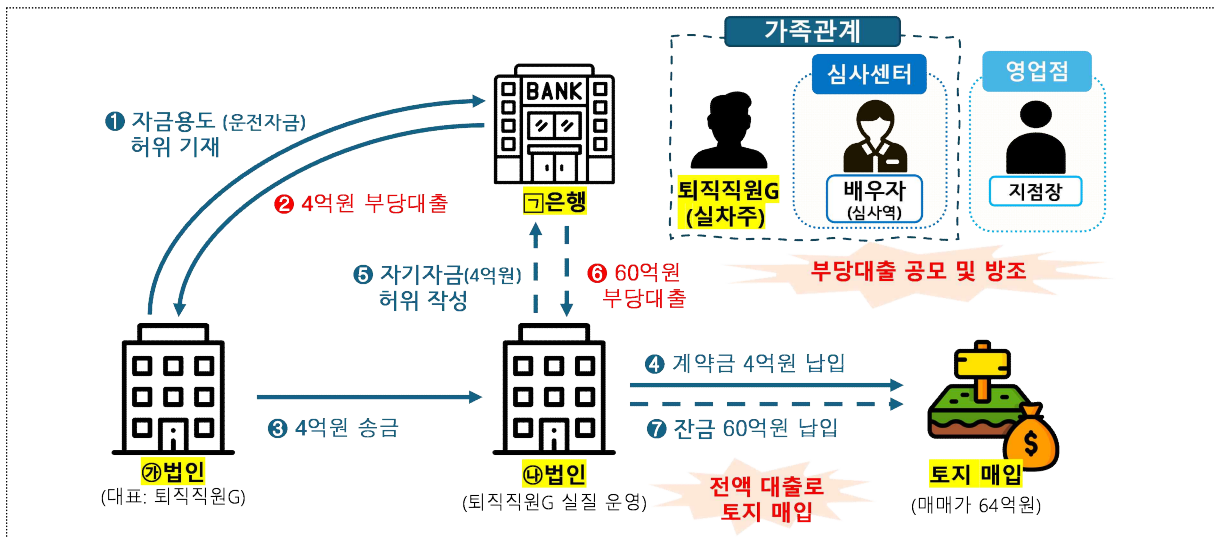
** ☐은행(18개 부점)에 등록된 법무사 사무소(본인은 사무장으로 활동)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G의 차명으로 운영, ☐은행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 5개 참여,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 제공,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 등

‘17.6월~’24.7월 기간 중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공모·묵인하는 방법으로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습니다.

- (사례① 토지매입 목적 부당대출) ☐은행 지점장과 G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등은 G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8.9월~11월 기간중 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하였습니다.

* ㉠법인 명의로 허위용도의 운전자금대출 4억원을 받아, ㉡법인의 자기자금으로 가장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한 후, ㉢법인 명의로 60억원 대출(잔금 용도)을 받아 토지를 매입

< 퇴직직원 G의 토지매입 관련 부당대출 흐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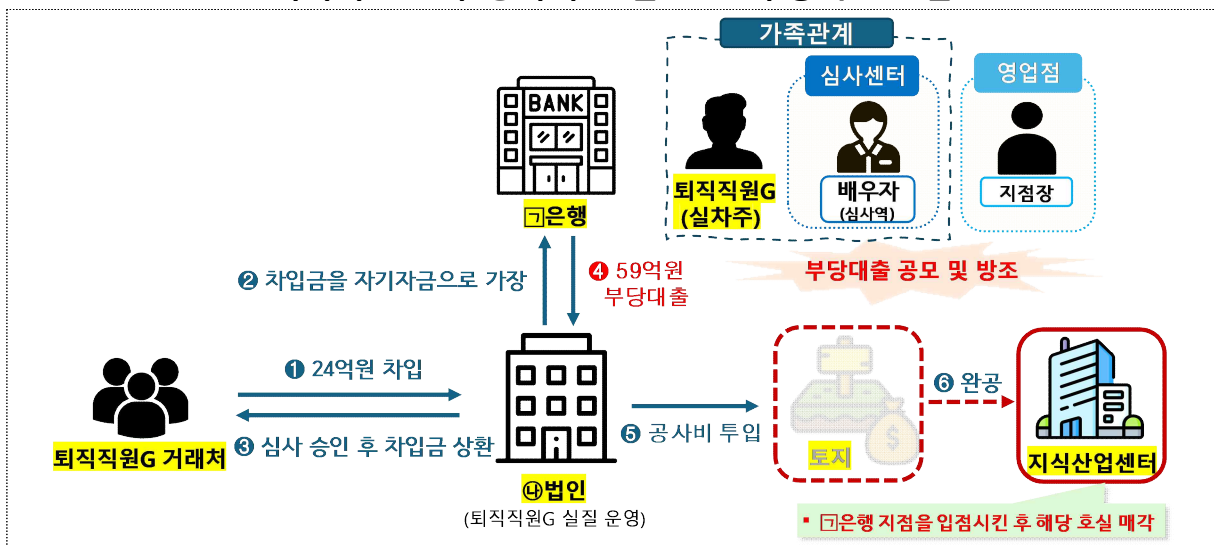


- **(사례② 공사비 목적 부당대출)** G의 배우자(심사역)는 G가 부당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처 일시 차입금으로 자금력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성 검토서 상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9월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하였으며, 지점장 및 타 심사역도 동 사실을 묵인한 채 대출을 취급·승인하였습니다.

* ④법인 계좌로 거래처 등 4명이 24억원을 입금하여 ④법인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여신심사를 통과한 1주일 후 24억원을 거래처에게 모두 반환

☞ 결과적으로 G는 자기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기 부당대출 ①, ②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공사비를 조달하였으며, 이후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이 발생하자, 고위 임원에게 청탁하여 G은행 점포입점이 결정된 후 매각 (10페이지 '현직임원-퇴직직원-거래처' 사례 참고)

< 퇴직직원 G의 공사비 조달 관련 부당대출 흐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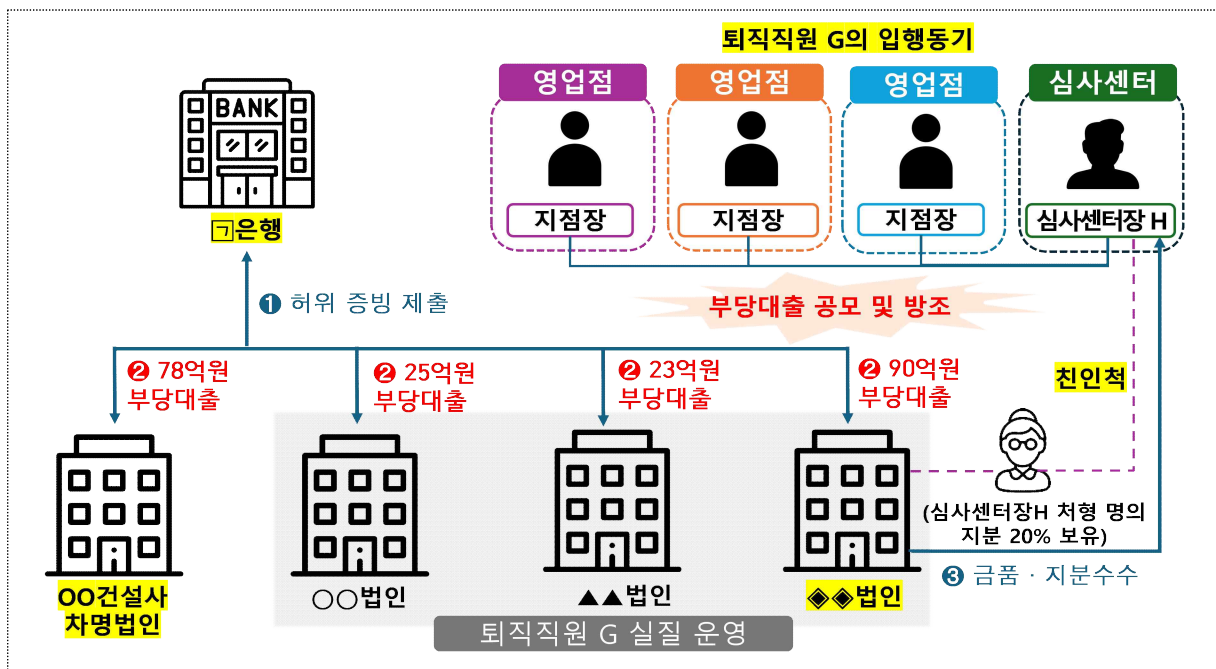


- **(사례③ 미분양상가 부당대출 알선)** 퇴직직원 G는 경기도 시흥 소재 미분양상가 25호실을 보유한 ○○건설사의 청탁에 따라 동 건설사에 대한 대출을 입행동기들인 심사센터장 H 및 3명의 지점장에게 알선하였으며

심사센터장 H 및 지점장 3명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가를 부풀린 미분양상가 구입자금대출 등 총 216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하였습니다.

※ G는 대출알선 대가(분양대행수수료 명목)로 ○○건설사로부터 12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며, H는 G로부터 현금 2억원 및 G의 차명법인 지분 20%(처형 명)를 수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 퇴직직원 G의 미분양상가 관련 부당대출 흐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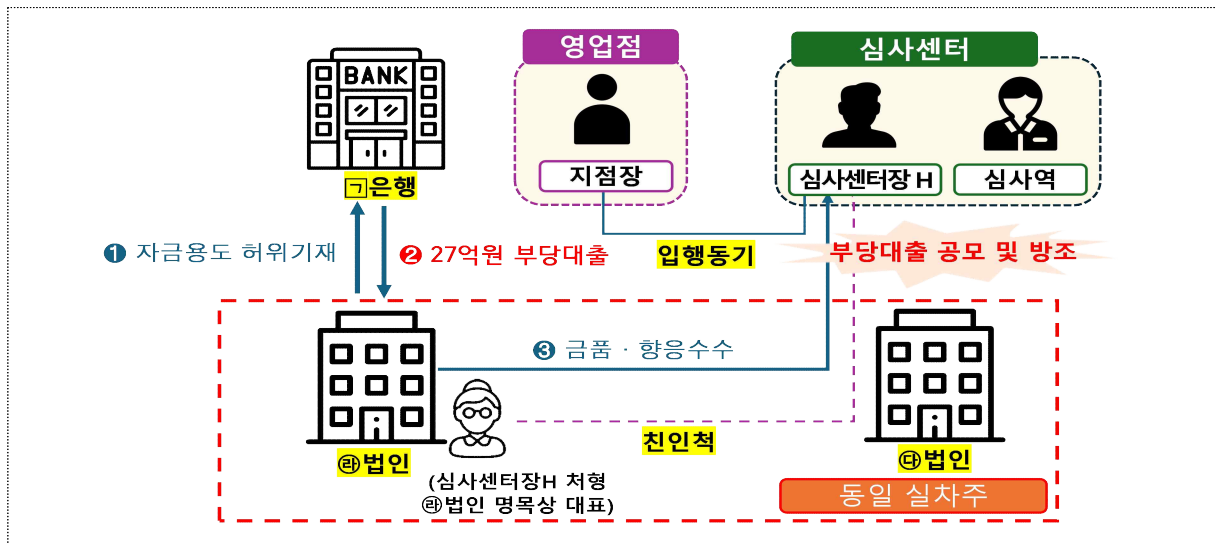


- **(영업조직 - 심사조직, 직원 - 친인척②)** 심사센터장 H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거래처인 ㉔법인과 공모하여 ㉔법인이 실소유하는 ㉔법인 대표를 본인(H)의 처형으로 교체('22.5월)한 후

입행동기인 지점장으로 하여금 ㉔법인 여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심사센터장인 본인이 승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22.6월~'24.10월 기간 중 5건, 27억원의 부당여신을 취급하였으며

- 그 대가로 처형 급여 계좌를 통해 약 2년 6개월간 98백만원을 수수하고 ㉔법인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골프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심사센터장 H의 처형 명의 법인 부당대출 흐름 >



- **(현직직원 - 퇴직직원, 사적 투자관계^㉔)** '17.3월 ◇◇지점 팀장 I는 과거 같이 근무한 퇴직직원 J의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업에 투자(2억원)한 후
- '20.6월~9월 기간 중 J의 요청에 따라 자금용도 및 대출증빙 등 확인 없이 총 2건, 70억원의 부당대출(운전자금대출)을 취급하였으며
 - '20.8월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J가 시행한 지식산업센터 내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지식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수수하였습니다.

※ 퇴직직원 J는 대출금 중 38억원을 개인 계좌로 유출하였으며, '22.11월 동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해당 대출은 '23.6월 부실채권으로 매각되었음

☞ '25.2월말 현재 ㄱ은행 부당대출 총 882억원(58건)의 대출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되었으며, 금번 부당대출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당대출 관련 금품수수 등)**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이 퇴직직원 G 등으로부터 총 15.7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 이 중 직원 2명의 배우자는 퇴직직원 G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급여 명목의 금전을 받은 경우로, 동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했는지 등은 수사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영업점 직원이 배우자가 취업한 업체 소유주와 관련된 여신을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 임직원*이 G로부터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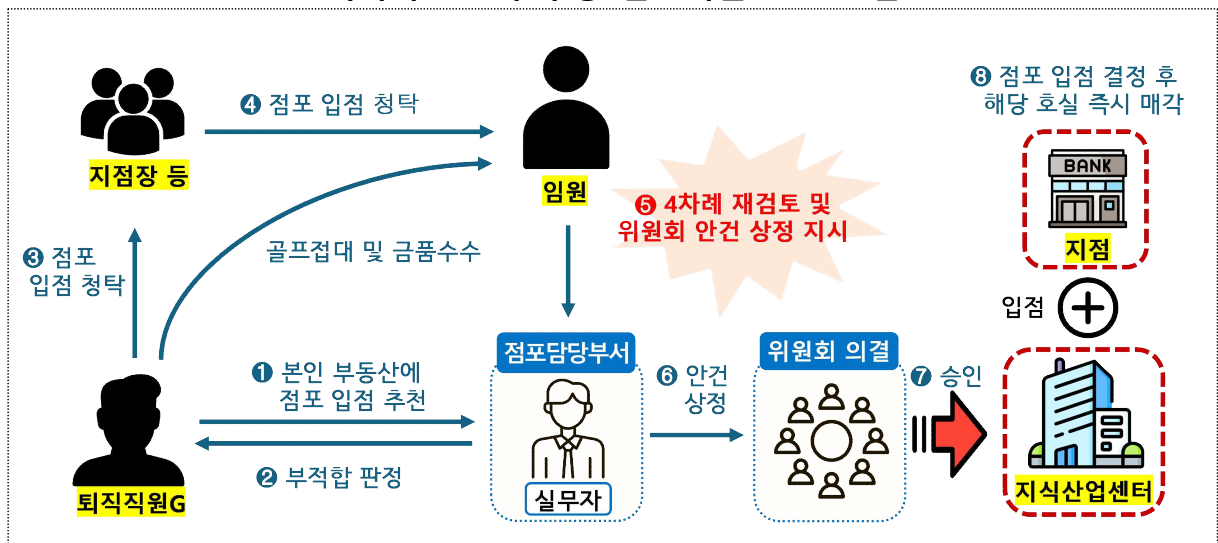
*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 포함 총 23명

- **(현직임원 - 퇴직직원 · 거래처⁴)** '21.4월경 퇴직직원 G는 □은행 점포 담당부서 실무자에게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은행 여신거래처)를 □은행 점포 입점 후보지로 직접 추천하였으나 은행 내부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 여타 지점 대비 면적 협소, 1km 이내 기존 점포(5개) 밀집 등

- □은행 지점장 등을 거쳐 동 은행 고위 임원에게 청탁하였고, 동 고위 임원은 실무직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와 점포 입점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안전 상정을 지시하여
 - '21.12월 위원회 승인을 거쳐 점포입점이 결정되었고, '22.8월 G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가 실제로 입점(신설)되었습니다.
 - ※ G는 점포입점이 결정된 직후 미분양이었던 해당 지식산업센터 호실을 매각
 - □은행 고위 임원은 G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국내외 골프접대를 받아온 사실이 있으며
 - G와 고위 임원은 점포가 입점('22.8월)된 직후인 '22.11월부터 고위 임원의 자녀가 G 소유의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하여
- 약 2년에 걸쳐 급여 명목의 금전 67백만원이 고위 임원 자녀 계좌로 지급된 사실도 있습니다.

< 퇴직직원 G의 부당 점포개설 관련 흐름 >



- **(이해상충 조사 등 관련 내부통제 미작동⁶⁾)** 이해상충 등 관련 부당 거래를 적발, 조치할 책임이 있는 □은행 ○○부서 및 ◆◆부서는 '24.8월 퇴직직원 G 및 입행동기 등 관련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24.9월~10월 중 자체조사*를 통해 다수 지점 및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하였으나

* ○○부서는 금품수수 등 관련 조사, ◆◆부서는 부당대출 관련 조사 실시

- ○○부서는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 혐의 조사 내용을 ◆◆부서*에 전달하지 않아 금융감독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금감원 앞 금융사고 보고업무를 담당

- ◆◆부서는 '24.11.14. “○○지점 여신 관련 검사방안 등 검토결과”라는 별도 문건*을 마련하여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하였습니다.

* 다수 지점이 연루되어 있어 동시검사가 원칙인데도, 동 문건을 통해 다수 사고간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순차적 분할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각 감사대상의 감사배경을 상이하게 기재하는 방안 등 사고 축소·은폐 방안 마련

- '24.12월 ◆◆부서는 동 문건 내용을 실제 실행한 후, '24.12.26. 에서야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하였으며

* 사고발견 경위 허위 기재, 특정 지역 부당대출 사고 및 일부 금품수수 내역 누락, 퇴직직원 G가 드러나지 않도록 “지인 A”로 기재 등

- 금감원 검사기간 중인 '25.1.16. 부서장 지시 등으로 ◆◆부서 직원 6명이 271개 파일(상기 문건, '24.9월~10월 자체조사 자료 등) 및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 ◆◆부서의 금감원 보고시 금융사고 축소·은폐 주요내용 >

- ○○지역 금융사고 현장검사 未실시 → 부당대출 未보고
- 다수지점이 연루되어 있어 “동시검사”가 원칙인데도, 사고지점간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차를 둔 “분할검사” 실시
- 금융사고 핵심 관련자인 퇴직직원 G를 ‘지인 A’로 표시하고, 사고자간 공모사실 未보고
- 금융사고 인지경위를 자체 영업점 종합감사에서 발견한 것처럼 허위보고
- 퇴직직원 G 관련 금품제공, 골프접대 未보고 등

◆ ☐사는 임차사택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한도·기간, 보증금회수 등과 관련된 내규 및 내부통제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이 총 116억원인 고가 사택을 제공

- 사택을 제공받는 임원이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임차를 가장하여 개인 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보증금 지원 사례 적발

☐ (회사 - 현직임원⑥) ☐사는 임직원에 대한 임차사택제공 등 관련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 '24.6월 현직임원 K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본인 사용 목적의 고가 사택(임차보증금 30억원) 제공을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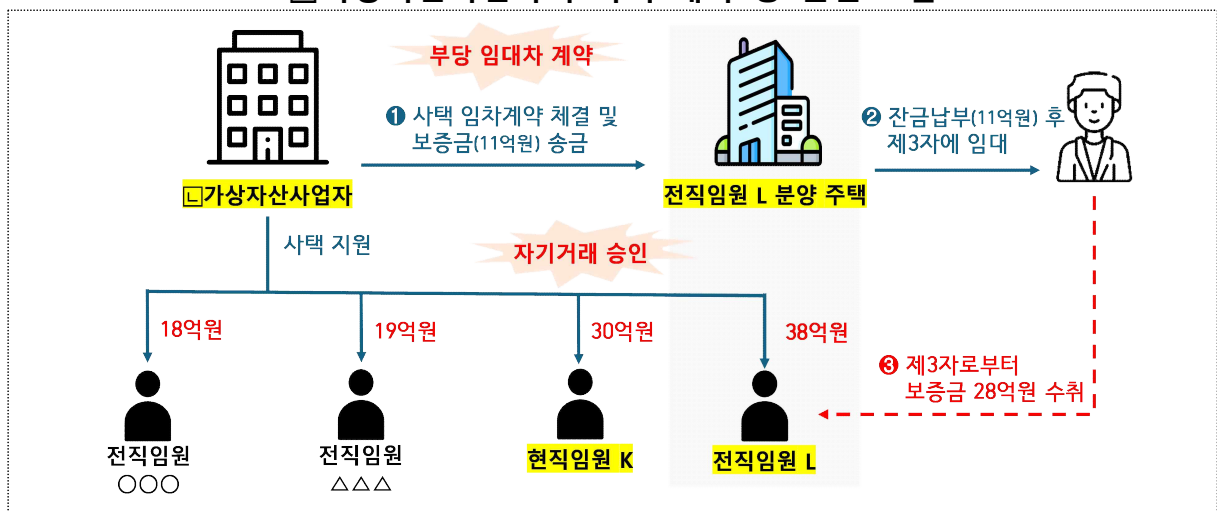
☐ (회사 - 전직임원⑦) '23.12월 ☐사는 전직임원 L(現 ☐사 고문*)이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사가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L에게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설립 이후 수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등기임원은 아니나 '사장' 직함을 가지고 고문 역할을 수행 중으로, 모회사 지분 등을 통해 ☐사를 간접적으로 소유

- L은 이를 개인 분양주택의 잔금 납부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동 주택을 ☐사에 사택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28억원을 수취하였습니다.

※ ☐사는 금감원 검사 후 보증금(11억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를 징계

< ☐가상자산사업자의 사택 계약 등 관련 흐름 >



☐ (금융회사 - 거래처(업무보조자)⑧) 금융회사 영업점의 등기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인 법무사 등을 통한 부당대출 및 금품수수가 발생하였습니다.

○ (☐농협조합)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M은 오랜기간 형성한 조합 임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출 중개·등기·서류제출 등에 관여하면서

- 준공 前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20.1월~'25.1월 기간 중 총 392건, 1,083억원(잠정)의 부당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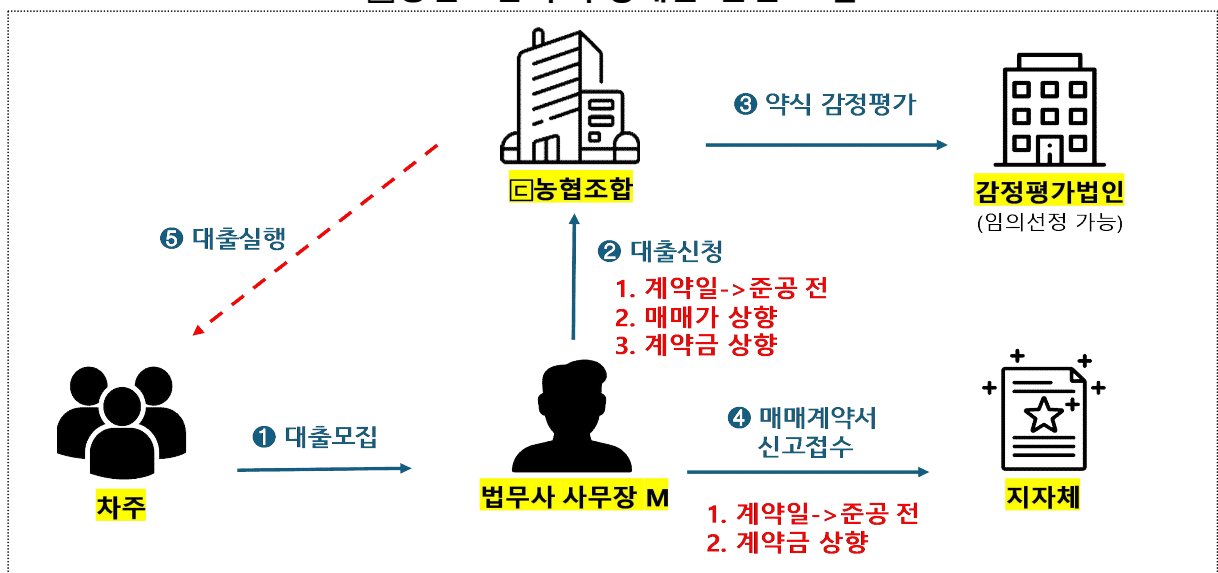
* 지자체에 매매계약서 신고(지자체 검인 날인)로 갈음(등기부등본에 매매가 미등재)

**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준공 후→준공 전), 매매가격(실제보다 상향)을 허위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실거래가 확인용 자료(지자체 검인 포함)도 변조

- ☐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대출심사 시 계약서 원본·계약금 영수증·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복수 계약서(대출심사, 실거래가 증빙용 등)상 계약일자 상이, 등기부상 매매계약일 이후 제3자(직전 빌라 소유자의 채권자)의 근저당 설정 기록 존재 등

< ☐농협조합의 부당대출 관련 흐름 >



○ **(☐저축은행)** ☐저축은행 부장 N은 PF 대출 차주사(시행사)를 위하여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하고 PF대출 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금품 (21.4백만원)을 수수하였습니다.

- N은 차주사(시행사)가 PF 대출 취급조건(자기자본 20%*)을 충족하지 못하자, 그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PF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의 사무장에게 차주사가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21.9월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하였습니다.

* 저축은행은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 가능(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별표1)

- N은 차주사가 사무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2억원*)을 차주의 자기자본에 포함시켜 심사하였고, '21.9월 해당 차주에 대해 부당 PF 대출 26.5억원을 실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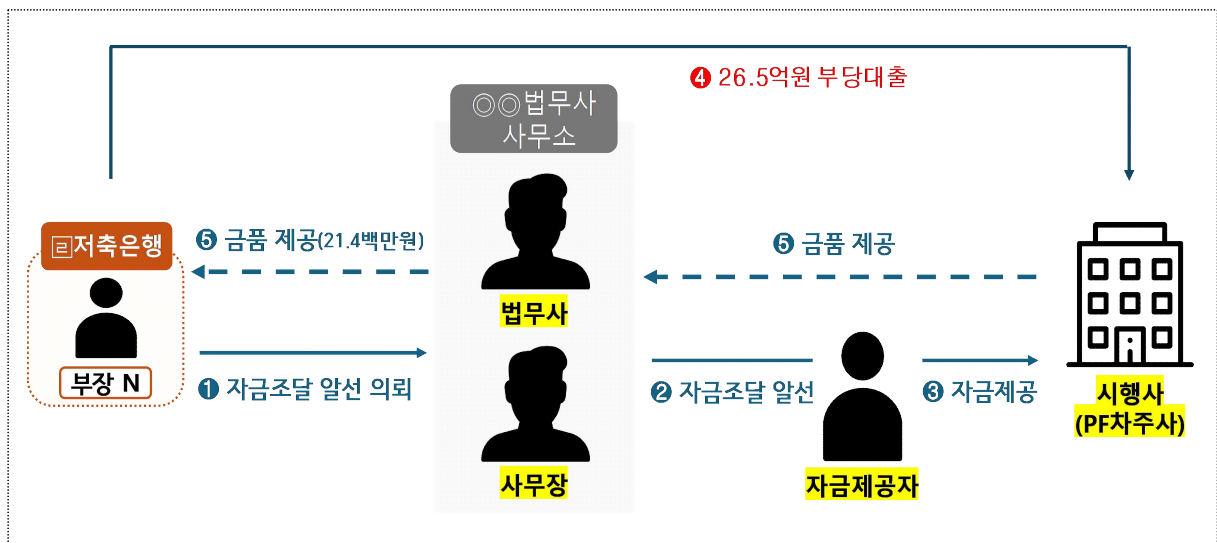
* 차주는 대출과 유사하게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고 월 2%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등 조달된 자금을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 N은 부당대출 실행 대가로 '21.11월중 차주사로부터 법무사* 계좌를 경유하여 2회에 걸쳐 총 21.4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법무사는 조달한 자금을 차주사에게 송금하고 차주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자금 제공자들에게 배분하는 등 자금중개 역할 수행

** 법무사 및 사무장은 자금조달 알선 등의 대가로 차주사로부터 총 6백만원 상당의 금전을 수수

< ☐저축은행의 부당 PF대출 및 금품수수 관련 흐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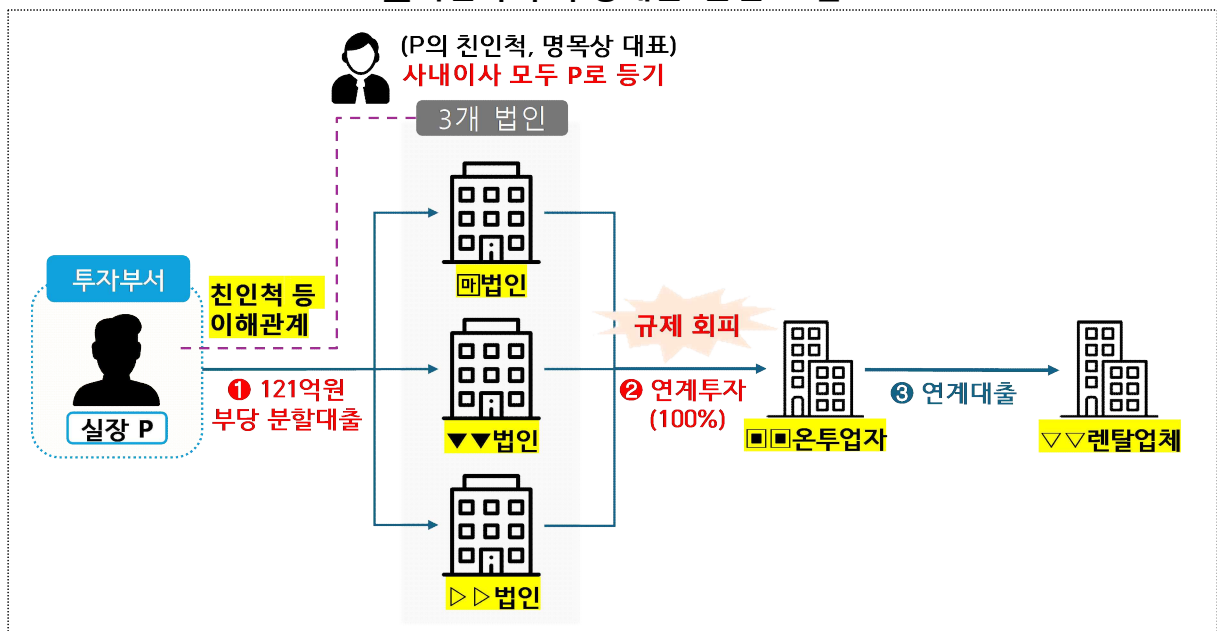
- ☐ (회사-직원, 직원-친인척^⑨) ☐ 여전사 투자부서 실장 P는 온투법상 연계대출 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법인 등 3개 법인(자본금 50만원)을 설립하여 본인(P)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 법인은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연계투자가 가능함(「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35)에 따라 ☐ 여전사가 동 규제를 우회하여 연계대출에 100% 투자하려는 목적

- '22.12월 ~23.5월 기간 중 이해관계가 있는 3개 법인에 대한 대출 심사요청서를 작성하는 등 심사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대출 (25건, 121억원)이 실행 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 여전사는 동 대출이 온투법상 한도 규제 회피 목적의 부당대출임을 알면서도 심사 및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 ☐ 여전사의 부당대출 관련 흐름 >



<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관련 기타 참고사례 >

- (☐은행) 지역본부장 000 등 다수 임직원은 전임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취급하고 동 지역본부장은 전임회장 친인척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례 [→ 상세내용은 '25.2.4. 보도자료('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 개최) 참조]

III. 향후 계획

1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위법사항 및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관련자에 대해서는 '25.1월~2월 중 고발·통보하였으며, 필요시 추가통보 예정

2 이해관계자·거래처 등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이번 검사결과 나타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25.2분기) 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 거래처 등록관리 및 실제거래 현황 정기적 점검, 거래처 관련 부정행위 내부 신고센터 운영 등

3 이해관계자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등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예)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 범위 확대 등

- 아울러 책무구조도 및 준법제보 활성화 등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한 거래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각 금융회사도 이번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이해관계자 및 거래처 관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BIS : Principle 20 :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국내 법규(은행법)	주요 차이점
40.46 (정의)	•Related Parties(이해관계자) a. 은행의 자회사, 계열사(자회사 및 계열사의 자회사, 계열사, 특수목적법인 포함) 및 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b. 은행의 대주주 또는 실소유자 c. 이사, 고위 경영진 및 주요 직원 고위경영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d. a~c에 명시된 자연인과 그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및 가까운 가족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신용공여 규제 등을 위해 특수관계인 을 규정 - 특수관계인은 대주주 배우자·인척, , 계열사(주식 30% 이상 소유 또는 최대주주, 공정위 기업집단) 본인 및 계열사 임원 등을 포괄 (시행령 §1조의 4)	•BIS의 이해관계자가 은행법상 특수관계인 대비 포괄 범위가 넓음 1) BIS는 은행 임직원이 아닌 제3자(예 : 퇴직자)도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경우 이해관계자에 포함 2) 은행법은 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임원에 대해서만 규정, 반면 BIS는 주요 직원도 포함 3) 은행법은 대주주(계열주) 친인척만 포함 , BIS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까운 가족, 모든 이해관계자와 직·간접 이해관계의 사람 포함
	•Related Party Transactions (이해관계자 거래) 신용공여, 용역거래, 자산 구매·판매, 공사 및 임대 계약, 파생 거래 등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신용공여, 자산거래에 한해 규정	•BIS의 포괄 범위가 넓음 BIS는 신용공여, 자산거래 뿐만 아니라 용역거래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
40.47 (필수 기준)	(1) 법, 규정 등에서 규제대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 감독당국이 개별 사례에 대해 판단 가능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 판단	•차이점 無
	(2) 이해관계자 거래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 제공 금지(Arm's Length Rule)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또는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의 매매, 교환, 신용공여 제한 (법 §35조의2 ⑧)	•신용공여 및 자산거래(무상양도, 매매, 교환)에 한하여 규제
	(3)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위험을 초래 가능한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해 이사회 사전 승인	•일정 금액 이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 지분 증권 취득시 이사회 사전 의결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의 거래에 한하여 이사회 사전 승인 절차 규정
	(4) (3)의 이해상충이 있는 이사회 구성원은 관련 거래 승인 절차에서 배제하는 정책·절차 마련	•법상 규정 無	•은행법상 이사의 이해상충 관련 규제 미도입 •상법(법 §391③)에서 규정
	(5) 이해관계자에 대한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거나, 담보 요구 또는 자본 공제 등 조치 의무 부여	•대주주 및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한도 (법 §35조의 2, §35조의 3) •모은행-자은행간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 필요 (법 §37⑦) •모은행-자은행간 요주의 이하 불량자산 거래 금지(법 §37⑦), 은행 및 자회사 등 임직원 대출 제한(법 §37③제3호, §38제6호)	•대주주, 자회사 등과 거래시 한도설정, 담보요구 등을 규정
	(6) 이해관계자 익스포저를 식별 및 모니터링·보고하는 정책 등 구축	•법상 규정 無	•은행법상 이해관계자 익스포저 식별 관련 규제 미도입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익스포저 합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정금액을 초과 거래 등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	•이해관계자 익스포저 합계에 대한 정기점검 등 별도 규정 無 •일정 금액 이상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 지분 증권 취득시 금융위 보고	•은행법상 이해관계자 익스포저 합계에 대한 정기점검 관련 규제 미도입 •대주주와 법상 허용된 거래시 감독 당국 보고 의무는 규정